

아침세평

박병진

금구초 교장·교육학박사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금 ‘정년 연장’ 논쟁의 열기 속으로 들어섰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 간 정치적 견해차와 세대 간 갈등, 재정 문제 등 복잡한 사회적 변수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급속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숙련 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은 결국 노동시장 구조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임금 체계, 고용 방식, 직무재설계 등 구체적인 해법이 포함된 사회적 타협이 불가피하다.

정년 연장 논쟁, 이젠 ‘찬반’보다 ‘설계’문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직을 중심으로 한 정년 연장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

교육 현장은 조직의 안정성이 높지만, 세대 간 인력 교체가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정년이 연장된다면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임금 체계다.

교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부문은 여전히 호봉제 중심의 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이 구조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고통 분담 없는 정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호봉체계편을 병행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나 이에 준하는 급여 보정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연령 이후 급여 인상 속도를 완화하거나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간제 교사에게 적용되는 ‘14호봉 제한’ 제도와 유사하게, 세대 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또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속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재편을 의미한다.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 이후 재고용 계약을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직에서도 정년 이후 희망자에 한해 기간제 교사나 시간제 강사 등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숙련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만65세까지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연한 방식이다.

그러나 계약직 신분의 불안정성과 청년층 일자리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교직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다.

결국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 사회 계약의 재조정에 가깝다.

청년 고용, 재정 부담, 고령화 대응, 근로자 권익 등 다층적인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요구만 반영한 일방적 추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 각계의 자율적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다.

고령자와 청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별기고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돌이켜 보면 지난 2025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큰 격량을 슬기롭게 헤쳐온 참으로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청년 이탈과 지역소멸 등 복합대전환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엄중하며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민선8기 광산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가능 일자리’를 의제로 질문을 만들고, 해답과 실행 방안을 찾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다.

1436개의 질문과 1만545개의 답변이 모아졌고, 올해 3월에는 ‘녹서’를 10월 말에는 ‘백서’를 발간했다.

23개의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고, 그 중 5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해 현재 실행계획서가 될 ‘청서’를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보자는 오랜 철학과 정책적 의

광산구를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불평등이며, 그것의 중심에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있다.

일지라는 단순히 한 개인과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마을에서 국가까지 생존·혁신·분배라는 3가지의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당면한 여러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UN에서는 2015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포함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안했다.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에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여전히 서늘(수도권), 대기업, 중앙정부 중심으로 자원과 자본이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지역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중앙은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양보다는 질의 개선, 사회임금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풀뿌리 사회적 대화 등 그동안 광산구가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후 일자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시민참여형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계·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일터에서 삶터로 폭을 넓히고 상층에서 기층으로 그 층을 확대하고, 상설적인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회적·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녹서·백서·청서 등 다양한 속의토론 방식을 포함한 체계적인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해야 한다.

지금 광산구가 걷고 있는 길,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이라는 새로운 정책은 광주를 넘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 7일에 열린 ‘2025년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광산구의 정책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독자투고

단풍 구경보다 안전이 최우선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전국 곳곳의 산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다.

가을철이 되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단풍을 즐기기에 산과 국립공원, 관광지를 찾는 행락객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아름다운 단풍구경을 마음껏 빼앗긴 나머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 휴어 사고가 발생할까 우려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졸음운전이 가장 큰 위험요소로 떠오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순간의 부주의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망률 또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비록 짧은 졸음 3초만의 졸음만으로도 차량은 시속 100km 기준 약 80m를 무방비 상태로 질주하게 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행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2시간 이상 운전 시에는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또 창문을 가끔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시키거나 동승자와 답소를 나누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단풍구경은 내년에도 다시 볼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한 순간의 방심이 쉴 수 없는 평생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들은 단풍구경보다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재택 교통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사설

광주·전남 내년 예산 ‘미래먹거리·민생안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기 회복 둔화,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확장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을 각각 7조6823억원, 12조7023억원으로 편성, 최근 광주·전남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광주는 올해 본예산 7조6043억원보다 780억원, 전남은 올해 12조5436억원보다 1587억원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 배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민생·성장·돌봄·기후 등 4대 전략 사업비를 대거 반영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재도와 자원 등 민생활력 분야에 소상공인 특별보증자금 75억5000만원 등 1768억원을 반영했다.

또 복지예산 성격이 강한 전 생애주기 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돌봄 분야에 2조2690억원을 책정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역 대표사업 추진과 미래 산업을 이끌 AI 전환(AX) 실증밸리 조성 73억원 등 혁신성장 분야에 3068억원을 투자기로 한 것이다. 도시철도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방재 규모가 약 2조700억원(채무비율 23.1%)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한 것이다.

그만큼 미래산업 선도과 글로벌 혁신도시 도약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전남도도 내년 예산안에 ‘AI·에너지·첨단산업 육성’, 민생 회복,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행복공동체 강화 등 4대 전략 분야 재원을 집중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55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이 확대 됐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16억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16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100억원 등도 반영됐다.

특히 ‘AI·에너지 첨단산업 수도’ 비전 구체화를 위한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렸다. AI 기반 인력양성과 스타트업 성장지원(10억원), 첨단로봇 AI 제조혁신(8억원), 대불·여수 국가산단 AX 실증 인프라 구축(7억원) 등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인프라 사업을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

광주·전남이 한층된 살림속에서도 지역 미래 성장동력과 시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아끼지 않은 셈이다.

오늘 대학 수능시험일, 좋은 결실 맺기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치러진다. 이번 수능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총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어난 총 55만4174명이 지원했으며 이는 2019학년도 59만4924명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여기에는 2007년 ‘황금돼지 해’에 태어난 이들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황금돼지 해에 아이를 낳으면 재물복을 타고난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오른 것이다.

지역 수능 응시자는 광주 1만7731명, 전남 1만4952명 등 총 3만2683명이며 광주 40개교와 전남 46곳 등 86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다행히도 이맘때 갑자기 찾아와 악명을 떨쳤던 ‘반쪽 수능한파’는 올해는 없다고 한다.

가상청이 “이날 대체로 맑은 날씨속에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평년보다 1~4도 높겠다”고 예보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전남경찰도 이날 수능 시험장 일대에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시험장 주변 교통소통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시험장 반경 2km 이내 주요 혼잡교차로를 중심으로 경찰관과 순찰차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시험장 출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대중교통 외 수험생 차량은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날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된다. 수험생들도 잠깐의 실수로 모두 무효처리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에 명기된 지정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1교시 전까지 대기해야 하고 수험표와 신분증, 실내용, 개인 도시락, 음용수를 지참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등 모든 전자기기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물품, 기타 충전식 기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전국민이 조용조용 지켜보는 수능일, 그동안 쌓아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정성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취재수첩

관급공사의 ‘검은 공생’ 관계 끊어내야

임영진

사회부 차장

익산지방공무관리청 산하 한 사무소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 간 전남 순천·해남 일대에서 진행한 국도 공사의 실체는 상상 이상이었다.

경찰 수사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발주 공무원과 일부 건설업체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는 유착이 존재했다.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내부 공무원이 특정 공법을 부각시켜 후보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개입도 확인됐다. 이들은 후배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후배는 언젠가 그 업체에 취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탁을 들어주는 구조였다.

건설업자와 가리단은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해의 골프여행과 노래방 등 유흥비를 지급

하거나 명절 떡값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경찰이 요청한 속도측정장치 설치에는 묵살됐다. 필요 없는 시설이 설치돼 국도 1억 4200만원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돼 있었지만, 선·후배 사이의 이해관계 앞에 무력화됐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14명, 관련 공사 규모는 약 22억원이지만, 수면 아래 숨겨진 비위와 관행은 훨씬 광범위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 브리핑에서도 내부자의 편법과 유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관급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이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주어지고, 퇴직 공무원과 현직 간 인간관계가 개입되는 구조는 근절돼야 한다. 제도의 투명성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과 업계 모두가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재와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관리만이 반복되는 비리를 막고, 국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일 수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